

금남로에서



신 홍 락

이사·논설주간

물지도 못하는 개라면…

금마지노선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둘이켜보면 민주당도 국정조사 무력화의 '공범'이라는 데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을 듯하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소위 진보 여론의 논조만 봐도 그렇다.

서울광장에 내몰린 민주당

민주당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라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단순한 여야간의 정쟁으로 여기고 있을 때이다. 국정조사를 회피시키기 위한 국정원과 여당의 북방한계선(NLL) 논쟁에 뛰어들어 문제의 초점을 흐렸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능과 무기력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국정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켜지고 있다. '횃불 아닌 민주주의가 살해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연일 촛불이 타오른 것은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한다.

민주당도 1일부터 20일째 '천막당사'를 펼치고,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선 것은 새누리당과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해야겠다는 '배수진'에 가깝다. 국정원과 여당의 방해 공작이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

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정국을 이끌어갈 전략도, 새누리당을 압박할 지렛대로 없이 그저 하염없이 끌려다녔을 뿐이다.

국민들이 허를 뿐인 국정조사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들러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칼날이 정부·여당을 겨냥할 전데 목을 내놓으리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개혁,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슬프 개혁' 한 가지만 주문하고 일축한 것도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셈이다. 대선 폐쇄 이후 끊임없이 전개된 내분이 국정조사에까지 전이되면서 마침내 집단 갈등을 키워 화를 자초한 것이다.

강한 야당, 정공법이 해법

지금 민주당은 위기다. 인물도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127석의 거대 야당이지만 존재감은 없다. 수십석의 의석으로 국민을 등에 업고 정국을 돌파해온 역대 야당과 과거 5공 청문회 등에서 선배 야당의원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 빛나는 성과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이다.

이제 민주당이 가야하는 길은 정도(正道)의 큰 길만이 있을 뿐이다. 먼저 내부적으로 친노니, 비노니 하는 파벌부터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여

자신을 빛낸 계파싸움이 역겨울 것이다.

적어도 천막당사에서 "오늘자로 민주당엔 파벌이 없으며 깨끗한 정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강한 리더십 창출과 비전을 갖춰 일사불란한 체제로 국민에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강한 야성(野性)을 바탕으로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광장정치'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도 민생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등원해 상생정치를 펴야 한다. 청와대 회동과 같은 선물에 '회군'한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쟁점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 시절 기초·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추천제를 배제하려한 민주당에 맞서 '13일 단식' 한 끝에 지방자치제 협상을 타결짓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나라당 대표 당시 정부·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한 제 53 일간 장외투쟁을 전개해 '사학법 전면 재운의'라는 양보를 받아냈다. 강한 야당과 정공법의 결과다.

'물지도 못하는 개라면 짖지도 말라'고 했다. 하물며 야당이 물고 늘어지지도 못하는 데서야. 민주당의 덩달아리는 호남사람들이 유례없는 무더위에 체감하는 '분노지수'가 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hlshin@kwangju.co.kr

은펜칼럼



서 미 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희망의 날갯짓하는 착한 기업 필리핀에서 만나다

는 더 많은 소득창출로 더 큰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꿈을 매일 꾸고 있다.

꿈꾸는 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일주일 간 NGO활동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민사회 발전과 NGO 구성원의 비전 수립 및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로 필리핀을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및 빚고을사랑운동사업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광주지역 NGO들에게 준 기회로 필리핀의 사회경제 운동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현장 견학으로 진행되었다.

필리핀의 착백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빙곤해소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주어 각자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착한 기업으로 그들의 삶의 긍정적 영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우리의 첫 방문기관은 NGO를 위한 NGO 단체 아시안브릿지, 빙곤과 개발, 여성과 환경, 국제평화 참여에선, 개혁, 개방을 이끄는 단체로 가난한 사람들의 빙곤문제 해결 차원에서 거점역할을 하는 단체로 그곳에서 필리핀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PhilSen'을 만났다.

필센은 사람중심의 상호교류를 통한 성장이라는 모토로 자연수력을 그동안 소나, 우마차를 이용해 물을 길러야 하는 불편

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단순하고 쉬워서 기술자가 따로 없어 지역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닭을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 문화로 가족단위의 소규모형태로 닭을 키우기 가구의 소득창출을 하는데 여기 참여자의 기준이 없고 빙곤층이 모여 있는 공동체지역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다. 필리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아직 데이터화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히 실적위주의 사업 추진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었다.

필리핀의 착백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빙곤해소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주어 각자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착한 기업으로 그들의 삶의 긍정적 영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히 실적위주의 사업 추진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었다.

필리핀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PhilSen'은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이경석

문태고등학교 교장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씀이 학생에게 지지와 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언제 과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과실을 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앗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삶을 동행할 뿐입니다.

1941년, 일제는 만주침략, 중일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아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습격하여 세계전쟁에 뛰어든 일제에 한반도는 전쟁을 위한 수탈기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집에서 식기로 사용하던 놋그릇까지도 빼앗아 갔다고 하니 한 둘의 쌀 알까지 수탈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창신개명을 통하여 이름마저 빼고 일본말만을 사용해이하는 학교는 황국식민의 양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일제 말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한국인의 정체성 말살 정책에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식민사관에 의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민족자존감 프로젝트의 부분행사인 '자리산 종주, 날개 캠프'의 빅미는 천왕봉에서의 해맞이와 광복절 행사입니다. 10회째 천왕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우들과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자존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후예로서의 자존감이며, 문태인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인술 선생님께서 새벽 05시 45분, SNS로 일출의 순간을 보내 주었습니다. 2012년, 천왕봉에 섰을 때 구름 사이의 희미한 아침햇살에 감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진 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옵니다. 학생들의 가슴 속에 들어찰 기쁨, 성취감, 자부심이 제 가슴에도 전해집니다. 이 새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날 민족교육에 먼저 눈을 뜨는 선각자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입니다. 그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그려집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주렁주렁 열릴 흐날의 과실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다시 되물어봅니다.

社說

여당 의원 지역감정 발언, 자질 의심스럽다

국회 청문회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 과문을 낳고 있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악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까지 지역감정 망령이 번져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번 사건의 최초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전남대 출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니"고 따져 물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결찰에 기소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두 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물론이고, 두 기관과 여당의 과오를 펼쳐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에 권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인증을 두고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빙느냐. 참 이상하지 않으나?"라는 대답을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

외국인 범죄 강력 대처해 재발 방지해야

광주에 제류 종인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 인데다 흉포화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320건으로, 2011년의 202건에 비해 118건(37%)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인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10명 중 불법 체류자가 12명에 달하고 있어 범죄 대비책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근로자 등 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광주 체류 외국인 수는 2.5배나 증증했다. 2006년 3024명이던 외국인이 올해는 7469명으로 4445명이나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28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95건, 지능범죄 47건, 절도 35건, 마약·강도·강간·도박 11건 등 316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를 범죄가 점차 조직화·흉

無等鼓

"10번째까지는 정신이 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물에 흡뻑 젖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계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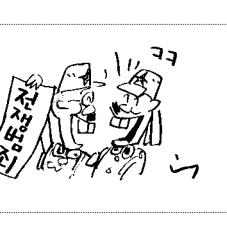
1992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 군인에게 성폭행당한 보스니아 여인의 증언이다. 1993년 유엔이 네덜란드 해이 그에 세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증인으로 나선 여인들은 차마 기억하기 싫은 당시의 끔찍했던 나날들을 되새겼다.

전쟁이 시작되면 여성들에게는 '자국'이 펼쳐진다. 이미 2000년 전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부하들이 점령지에서 적의 딸과 아내, 어머니를 무자별 성폭행 했듯이 인류가 치른 거의 모든 전쟁에 서 여성들은 '핵심 전리품'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평전국의 아내와 딸, 그리고 그 남편과 아버지가 겪어야 하는 성폭행의 고통과 치욕은 '관행'이라는 미명에 가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멀리 갈 것 없이,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딸과 누이, 아내, 어머니가 일제의 검은 손아귀에 농락당했다. '위안부' 역시 성폭행 피해자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제사회는 ICTY의 판결을 통해 '성폭행은 전쟁범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것을 모르는 혹은 무시하는 국가는 일본 뿐이다.

/홍행기 사회팀장 redplane@kwangju.co.kr



그러나 평전국의 아내와 딸, 그리고 그 남편과 아버지가 겪어야 하는 성폭행의 고통과 치욕은 '관행'이라는 미명에 가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멀리 갈 것 없이,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딸과 누이, 아내, 어머니가 일제의 검은 손아귀에 농락당했다. '위안부' 역시 성폭행 피해자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제사회는 ICTY의 판결을 통해 '성폭행은 전쟁범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것을 모르는 혹은 무시하는 국가는 일본 뿐이다.

/홍행기 사회팀장 redplane@kwangju.co.kr